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5/ 31 통권 162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갓 땀, 명품죽!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세요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식당 개인사업자 10억 달성 후 법인전환과 차별화된 프랜차이즈의 신규 법인설립 자문 사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기업회계상의 선적지인도조건 충족하는 경우만 미착상품을 재고자산으로 반영함
-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세요
-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해외 수출 적극 지원
-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여
-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로 선정
- 빅데이터 기획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세액 정리 강화
- 국제정,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 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관세관청의 소득처분시 소득 귀속자는 법인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음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종합소득신고납부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 범위와 소득공제 계산〉

소득구분	대응 필요경비 열거 예시와 일정비율 소득공제방법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대응경비, 상품·제품·원재료가격, 운반보관료, 판매수수료 등, 임직원 급여, 사업용 자산 양도수입금액의 장부가액, 사업상 제세공과금, 근로복지기금, 퇴직관련부담금, 4대보험법상 부담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가상각비, 대손금 등, 기타 총수입금액 대응경비
근로소득	근로수입금액별 소득공제(500만원까지 70% + 1500만원까지 40% + 4500만원까지 15% + 1억원까지 5% + 1억 초과 2% ≤ 2천만원)
연금소득	① 총 연금 중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비용 ② 연금소득공제(350만원 + 700만원까지 40% + 1400만원까지 20% + 1400만원 초과 10%) ≤ 총 900만원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총액과세(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없음), 연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기타소득	공익법인 상금 등, 위약금, 배상금, 주택임주지체상금 : 기타수입총액의 80%
	광업권 등 각종 산업재산권, 전자상거래 사용료 금품, 공익사업 지상권·지역권 등, 문예·미술·음악·창작물, 강연·출연·전문직의 지식기술보수 : 총액의 60%(2018년까지는 70%)
	서화·골동품 등 : 입금액 1억 이하는 90% + 1억 초과액은 80% (보유 10년 이상 90%)
	종교인 소득 : 2천만원까지 80% + 4천만원까지 50% + 6천만원까지 30% + 6천 초과액 20%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25호 / 주간 22호

2023. 05. 31.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종합소득신고납부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 범위와 소득공제 계산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식당 개인사업자 10억 달성 후 법인전환과 차별화된 프랜차이즈의 신규 법인설립 자문 사례	2
C E O 에 세 이	갓 댐, 명품족!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고정자산 부가세·설비투자명세서 감가상각자산종류 문의 - 입주업체에 대한 일시적인 무상임대 관련 문의 -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 출처리 여부 문의 - 수출품 소급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기업회계상의 선적지인도조건 충족하는 경우만 미착상품을 재고자산으로 반영함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주택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여부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9 10
직 장 인 Survival	직장인 영어회화 공부법 일곱번째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함 (서면법규재산-8218, 2022.04.13)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서면법규기본-2548, 2022.12.14)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지방세특례법」 대표발의, 농기계·농업용수시설 면세 특례 연장	14
마케팅 Tax consulting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시 소득 귀속자는 법인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음	13
세 무 정 보	-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세요 -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해외 수출 적극 지원 -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여 -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로 선정 - 빅데이터 기획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세액 정리 강화 -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15 20 27 33 36 39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26

식당 개인사업자 10억 달성 후 법인전환과 차별화된 프랜차이즈의 신규 법인설립 자문 사례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개념, 구분	개인사업자 유지	법인전환, 법인설립
설립등기	주민등록으로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 등록
법인방법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포괄양수도)	① 법인전환 ② 신규법인 설립
법인비용	추가비용 없음	법인당 3년 단위 이사 등기비 30만원 발생
출자분산	개인사업주 100% 전유	출자자본금 분산가능(배우자와 자녀 외는 명의신탁분산주의 : 증여공제 초과액은 증여세 부담)
대표급여	개인사업자 이익 전체가 대표 급여	법인이익에서 대표자 급여 비용처리 (2개법인에 골고루 급여 분산하여 부당행위 예방)
통합손익	사업장이 달라도 개인소득 통합	별도 법인이므로 이익통합 안됨
세금부담	개인사업자 1년 단위 이익 전액에 다단계누진세율 적용	법인이익에서 대표급여(다단계 누진세율) 차감 후 순이익 2억에 9%, 초과액에 19%로 과세이연가능
자금인사	개인이므로 다양한 자금, 인력 조달 제한	외부차입, 투자유치, 인력채용시 유리(2개법인 유리)
세무간섭	개인사업자 매출 크면 상위랭킹으로 조사 대상	법인사업자 이면 매출랭킹 하위로 조사가가능성 낮은 편임
미래전략	성장지속하면 결국 법인전환	성장후 합병, 통합, 분할의 유리한 선택

갓 뎀, 명품족!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공자 말씀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있다. 지나친 것은 못 미친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리스 속담에도 있다. 'Nothing too much, no excess.' 지나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반세기 전만해도 '우직하고 묵묵한' 사람을 더 미더워했다. TV 카메라를 갖다 대면 다들 도망치거나 수줍게 한마디 했다.

요즘 애들은 카메라 렌즈에 먼저 얼굴을 들이민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브이(V)자로 흔들면서 모두 두서없이 소리를 질러 댈다. 유튜브 흥내를 내며 어른 놀이를 한다. 사려깊기보다는 말이 앞선다.

반세기 전만해도 "말 많으면 사기꾼!" "청산유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돌았다. 극단주의를 경계했고 강요하는 말보다 실천에 따라 스며드는 감화를 중시했다. 요즘처럼 유행어나 신조어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온갖 이벤트로 유난을 떨지 않아도 오래 갔다.

또 차별화와 선명보다는 화(和)에 무게를 뒀다. 나(ego)보다는 관계(relation)와 공존을 추구했다. 허풍보다는 내실을 따졌다. 돈보다는 인간을 우선했다. 물론 그때도 인간을 우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에 가까이 하려는 노력은 했다. 요즘처럼 까놓고 허영과 사치와 돈을 탐내지 않았다.

반세기 전만 해도 부잣집과 명문가를 혼동하지 않았다. 영국의 명문가 자제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군입대를 한다고 한다. 많은 한국 재벌가 아들들이나 유명인사들의 병역기피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명문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사회적 헌신을 다할 때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붙여주는 영예로운 호칭이다.

코리아 에어텍의 김재년 사장은 서울상대와 한국은행의 엘리트 출신이면서도 조용한 오너 리더십의 표본이다. 조용한 리더십이란 그가 사장인지 아닌지 도무지 티가 나지 않고 마스크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소리 없이 오랜 세월 좋은 일에 돈을 쓴다는 뜻이다.

그의 증조부는 일찍이 자결로써 한일 합방에 저항했다. 조부는 일본이 주는 귀족 작위와 부를

거절했고 벼슬길조차 버렸다. 부친이 바로 훈민정음 서체를 창안한 서예대가인 고 일중 김충현(一中 金忠顯) 선생이다. 필자의 서예 스승이기도 하다. 이런 가문을 명문가라 한다. 많은 조선시대 명문가들도 그랬다.

반세기 전만해도 연예인을 감히 공인이라 하지 않았다. 공인은 사전에 있는 것처럼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귀족작위까지 받은 영국의 연극인이자 영화배우인 로렌스 올리비에에게도 공인이라 하지 않았다. 인기인일 뿐이다.

물론 연예인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공인답게 사회적 헌신을 하겠다는 마음을 마다하지는 않는다. 하긴 대통령들도 돈 해먹고 감옥 가는 판이다. 찍하면 자서전을 낸 후 감옥에 가거나 지식인을 시켜 경영업적을 미화시킨 책을 낸 후 재벌들이 검찰에 끌려 다니는 세상이다.

얼마 전 부자학 세미나에서 재일동포 2세가 일본부자와 한국부자를 비교한 보도가 있었다. "벼락부자나 조폭간부, 연예인 등이 너도나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며 있는 티를 내는 통에 정작 진짜 일본부자들은 그런 소비를 그만 뒀다. 한국부자들은 아직도 명품을 좋아한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그의 저서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에서 '명품 삶에서 명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명품'같은 이념은 없다. '좌빨(진보좌파 빨갱이)'과 '우꼴(우파 꼴통보수)' 모두에 속지 않는 게 중도실용·통합이다.

시장경제를 보는 눈도 한층 깊고 넓어져야 한다. 죽은 시체를 파먹듯 하이에나 같은 펀드자본주의, 돈놀이의 귀재 조지 소로스를 영웅시해선 안 된다. 노사 리더들의 삶이 명품이 되어야 노사화합이 있다. 일테면 장애인고용에 애쓰는 이케이 맨파워의 김동규 사장의 경우와 같다. 그게 중도실용·통합이다.

고정자산 부가세_설비투자명세서 감가상각자산종류 문의

Q 회사 내부 공장의 생산 라인의 물류자동화를 위해 AMR(Autonomous Mobile Robot)/AGV(Automated Guided Vehicle) 도입하여 고정자산 처리 진행 예정입니다. AMR/AGV의 특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라인을 돌며 공박스를 회수하거나 생산라인과 창고를 이동하며 상품을 이동
2. 사람이 탑승 운전 X, 유도선 또는 추가 장치를 이용해 신호를 주고 받아 무인 운행
3. 구동은 서보모터로 움직이며 전원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

이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위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 명세서 작성 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 감가상각자산 중 어느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물류자동화를 위한 이동장치는 기계장치보다는 기타 감가상각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주업체에 대한 일시적인 무상임대 관련 문의

Q 본원에서는 2022년 8월부터 5년간 갱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식당)가 있습니다 (최초는 2012년부터 입점)

본 계약시 체결한 임대료는 공급가액 13,600,000원으로, 최근 업체 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2022.12월부터 23년 2월까지 3개월간 해당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아님)

이와 별개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납부 예정입니다.

질의 : 상기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 부가법 외에도 고려해야 할 세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또한 추후 세무당국에서 질의 시 구비해야할 문건 등이 있을 지도 여쭙습니다.

A 임점업체와 귀원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임대료 인하에 대한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으며, 세무당국에서 질의시 해당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출처리 여부 문의

Q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하고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출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오래전에 고객사에 납품한 재고를 고객사에서 판매하기 위해 당사 부품 교체 및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납품한것이 아니고 단지 제품 안에 부품을 교체한것인데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별도의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최초 납품계약에 따라 부품 무상교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제품납품후 해당 제품에 대한 별도의 부품교체 거래의 경우로 부품교체비용을 추가로 받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매출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출품 소급

Q 수출품의 단가가 인하되어, 그 부분만큼 올해분 정산하여 외화송금 해줘야하는데,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제품수출시

외상매출금 / 제품수출

*단가인하 소급(인보이스발행)

1번

대변) - 제품수출

대변) 외상매입금 (대변에 제품수출마이너스 및 외상매입금 분개가 가능한지)

2번

차변) 잡손실 / 대변) 외상매입금 (수출품 단가인하라 지급을 위해서 외상매입금은 아닌것같은데 가능한지)

3번

차변) -외상매출금 / -제품매출

외상매출금 / 외상매입금

A 매출(수출)후 단가가 인하되었다면 매출(수출)금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므로 3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회계상의 선적지인도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미착상품을 재고자산으로 반영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은 결산과정을 통해 특정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는데, 명확한 결산을 위해서는 거래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매출 및 매입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일 전후에 발생한 거래의 경우 어느 회계기간의 거래인지 정확하게 결정하여야 특정 회계기간의 매출,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거래의 귀속시기 결정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미착상품의 장부계상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만 재고자산으로 반영

결산시점에 미착상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실무자들이 실수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FOB조건, CIF조건에 따라 재고자산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FOB조건이라면 무조건 선적시점에 재고자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는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이 아니다.

기말 현재 운송중인 미착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산 계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제7장 재고자산)은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목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계상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인식”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실무지침 7.5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제16장의 제1절 ‘수익인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7.3)

(1) 미착상품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는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선적지인도조건인 경

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착상품에 대한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인식할지의 여부는 법률적인 소유권 즉, 선적지인도조건 및 목적지인도조건의 매매계약상 거래조건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인식)에 따라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고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FOB조건 등은 미착상품의 재고자산 반영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국제상공회의소는 국제무역 거래 당사자들 간에 법률, 언어,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약칭INCOTERMS)’라는 무역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다.

INCOTERMS는 매수인 및 매도인의 운송수단 · 주체 및 검사 등에 대한 의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 및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규정으로 CIF와 FOB를 포함하여 13가지 거래 조건이 기술되어 있다.

즉, CIF와 FOB 등은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의무와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 및 비용의 부담 주체를 분류해 놓은 규정 중의 하나일 뿐이며, 해당 거래 조건이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적지 인도조건, 목적지 인도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FOB조건이라고 해서 모두 선적시점에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FOB조건일지라도 계약서를 검토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이 대부분 언제 이루어지는지, 거래 이후에도 매도자가 재화의 운송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지는 않는지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최종 판단 결과 계약조건이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미착상품을 매입자의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참고]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거래 종류

EXW-작업장 인도조건	CIF-비용·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DEQ-부두인도조건
FCA-운송인 인도조건	CPT-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FAS-선측인도조건	CIP-운송비·보험료 지불인도조건	DDP-관세지급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	DAF-국경인도조건	
CFR-운임포함 인도조건	DES-착선인도조건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주택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여부

구분			월세	전세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비과세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비과세	
2주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비과세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3주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3억원 초과분 과세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달라진 근로소득세율 기준

기존		2023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원)	세율(%)
~1200만원	6	~1400만원	6
1200만~4600만원	15	1400만~5000만원	15
4600만~8800만	24	5000만~8800만	24
8800만~1억5천만	35	8800만~1억5천만	35
1억5천만~3억	38	1억5천만~3억	38
3억~5억	40	3억~5억	40
5억~10억	42	5억~10억	42
10억~	45	10억~	45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증가 완화

구분	종 전		개 정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세율 조정	2주택 이하 기본세율 0.6~3.0%	3주택 이상* 중과세율 1.2~6.0%	2주택 이하* 기본세율 0.5~2.7%	3주택 이상* 중과세율** 0.5~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중과	
세부담 상한 조정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가 배제 연장

구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증가 배제 연장
① 증가 배제 대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②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6~45%) 적용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 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연 2% 공제율 적용)
④ 증가 배제 기간	개정 : 2022년 5월 10일~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 배제



직장인영어회화 공부법 7

질문을 많이 하자

동료가 항상 당신을 이해하더라도 당신은 동료를 항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원어민은 일반적으로 매우 빠르게 말하고 단어를 혼합하며 많은 영어 관용구를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에서 듣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직원들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봐 직장에서 질문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부당합니다. 직장에서 질문하는 것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배우고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영어를 구사해야 하는 비영어권민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우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나중에 다시 물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처음에 이해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필요할 때마다 질문하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활동이 당신의 직업에 적용되는지 파악했다면,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영어 말하기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 밖에서 연습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어 시나리오를 미리 연습하면 그들이 직장에 나올 때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시 소득 귀속자는
법인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
할 수는 없음

서면징세-6246, 2022.11.28

■ 질 의

- 법인A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은 0000년 신청인 명의 특허권 지분을 감정평가액으로 A법인에게 유상양도하고, A법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납부함
- A법인은 0000.0. 회생계획인가 결정되고, 신청인은 A법인의 지배주주 및 임원 지위에서 물러남
- A법인 관할세무서는 0000.0. "0000 사업연도에 신청인이 유상양도한 특허권 대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상여"라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A법인에게 발송하고, 신청인은 소득금액변동사항 통지서를 수령함

질의

- 「소득세법」제155조의4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대법원2012두27954 (2013.4.26.)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

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함

서면법규재산-8218, 2022.04.13

■ 질 의

-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더 작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4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서면법규기본-2548, 2022.12.14

■ 질 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결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일부 누락됨에 따라, 추후 과세관청의 부과·징수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제출과 관련하여
 - (질의1)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 해당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4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내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지 여부
 - (질의2)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을 제출하면서 당초 원천징수 누락된 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 해당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4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내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지 여부
 - (질의3)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을 제출하면서

원천징수 누락된 소득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 해당 근로소득자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4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내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해당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계산 방법

■ 회 신

- (질의1·2)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3)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 및 납부한 경우, 이후 해당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담하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액(본세에 한함)을 차감한 후의 추가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지방세특례법’ 대표발의, 농기계·농업용수시설 면세 특례 연장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의장은 24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올해 말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데에 농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오는 2023년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 시설 취득세 면제 건수는 총 6만여건, 감면액은 약 5억원, 농업용수 관정 시설 재산세 면제의 경우 5만 7천여건,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중견기업 위한 세액공제 간담회 개최..."경제 재도약 앞장서달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세액공제 등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증가분) 10%다.

기업상속공제 및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는 대상을 매출액 4000억 미만까지만 적용하던 것을 5000억원 미만까지 늘렸으며,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을 완화했고,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으며, 기업상속공제

최대 혜택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렸다.

이날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기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답했다.

회계기준원, ISSB SASB 국제적용가능성 공개초안 의견수렴

회계기준원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에 대해 ISSB가 오는 8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ISSB는 의견수렴을 통해, SASB 기준의 개정방법을 결정, 올해 말까지 SASB 기준의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SASB 기준의 일부 지침은 미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이 어렵다.

문제 되는 영역은 SASB 기준 지표 중 기후 외 주제와 관련된 지표로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참여,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기후 외의 지표이다. 기후와 관련된 SASB 지표는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SASB 기준의 본래 의도는 유지하면서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참조사항으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보다 일반화된 정의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기업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규정 등의 참조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국제적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는 삭제 ▲본래의 의도와 일치하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체 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로 대체 등이다.

ISSB는 정보요청서에 대해 오는 8월 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ISSB는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IFRS S1 시행일 전에 이와 관련된 SASB 개정을 완료한다.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세요

- 국세청 : 2023. 5

-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5월 18일(목)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10만원 당 1점)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되었으며,
 -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6월 1일(목)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으며,
 -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습니다.
-



1

업무협약 추진배경

-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 부여(10만원 당 1점, 고지납부 시(개인) 0.3점)

< 세금포인트 사용처 >

내 용	시 기
①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최대 5억 원)	'04.4월~
② 소액채납자(1천만 원 이하) 재산 매각유예(최대 1년)	
③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중소기업 제품 5% 할인)	'20.8월~
④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⑤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⑥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할인(10% 할인)	'22.3월~
⑦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20% 할인)	

- 올해에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목)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업무협약 개요 >

- ▶ 일 시 : '23. 5. 18.(목)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
▶ 참석자 : (국세청) 청장, 납세자보호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중소중견사업본부장 등

- 이번 업무협약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되었으며,
-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업무협약 내용

-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6월 1일(목)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란?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서비스 신청)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 선택 후 신청
 - * ① 요약보고서 : 일반현황, 신용등급 평가정보 등 제공
 - ② Full Report : 신용조사 보고서 원본 + 요약보고서 제공



-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중소기업이 세금포인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고,
 -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으로 국외거래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 감소, 무역사기 방지 등 안전한 수출 환경 조성 및 수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협력 사례로서,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습니다.



3 서비스 이용 방법

①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 접속

-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www.ksure.or.kr)에서 사이버 영업점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손)택스로 접속하는 경우,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을 통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②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신청

- 사이버 영업점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화면에서 약관확인·국외업체 정보입력·보고서 종류 선택 후, 세금포인트 사용여부 '여' 체크 및 세금포인트 '활용동의'를 하면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기업이 선택한 보고서 종류별 필요한 세금포인트는 요약보고서 33p, Full Report 49p이며, 조사 이후 제공되는 정보·시기에 따라 실제 차감되는 세금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종류	일반조사		재무제표 미비		정보부족 또는 40일 초과	
	수수료	차감 세금포인트	수수료	차감 세금포인트	수수료	차감 세금포인트
요약보고서	33,000원	33p	22,000원	22p	면제	0p
Full Report	49,500원	49p	33,000원	33p	면제	0p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절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로그인) >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용조사신청

- (1) 신용조사 약관확인
- (2) 국외업체 정보입력
- (3) 보고서 종류 및 세금포인트 사용여부 선택
- (4) 세금포인트 활용동의(신용조사 완료 후 세금포인트 차감)

4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참고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개 인	법 인
세금 포인트 부여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여 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부여 기준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 분 제외)
세금 포인트 사용	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개인·법인) - 납세유에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1p당 10만 원)	
	②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 (개인·법인) -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1p당 10만 원)	
	③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④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⑤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개인)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⑥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개인) -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제공	
	⑦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 (개인) - 국립수목원 입장료 20%(1천 원) 할인 제공	
	⑧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법인)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제공	
세금 포인트 조회		①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②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해외 수출 적극 지원

— 국세청 : 2023. 5

- ◎ 국세청 (청장 김창기)은 지난해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①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신고안내 확대 (' 21.5. 212만 명 → ' 23.5. 640만 명)
 - ② [부가가치세 신고] 대화형 신고 확대 (' 23.7. 35만 명 → ' 24.1. 122만 명 예상)
 - ③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단일물건, 최초양도) 신고 시행 (' 23.4.)
- ◎ 이를 뒷받침하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과학세정에 세계 과세당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① 한 · 헝가리 국세청장 회담 (4.25.)
 -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세정 사례와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추진현황을 소개
 - 적극적 세정지원과 이중과세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
 - ② 탄자니아 조세청 (TRA) 고위 공무원단 방문 (4.18.~4.20.)
 - 전자세정 교육, 정보통신기술 현장 확인, 양해각서 (MOU) 체결 추진
- ◎ 4.20.(목)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자세정 수출동향과 국세청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 * 삼성SDS, LG CNS, SK C&C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 업체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의 앞선 전자세정 시스템을 세계에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I K-전자세정,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홈택스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영세납세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연금·기타 소득자 등에게도 제공하여 2021년 212만 명에서 2022년 497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금년 5월에는 이를 전체 신고안내인원(1,285만 명)의 절반인 640만 명까지 확대하고, 납세자가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한편,
- 스마트폰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간편하게 수정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납세자도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납세자들이 어려워했던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 국세청은 금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납세자가 질문에 답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대화형 전자신고, 세금비서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 * 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대상
- 세금비서는 복잡한 신고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세금비서 화면으로 바로 안내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문답화면을 통합·단순화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여



- 금년 7월에는 일반과세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35만 명)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전체 등으로 확대(122만 명)할 계획입니다.

③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 금년 4월부터 계산이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해
 - * 과세기간(1.1.~12.31.) 중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건의 부동산(주택·건물)을 최초 양도
-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양도·양수자, 자산소재지 등 물건정보, 취득등록세 등 필요경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 또한, 금년 8월에는 거래 형태가 단순한 경우*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 주식 거래 종목 3건 이하('21년 귀속 기준 전체의 87%)

II

K-전자세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들

-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K-전자세정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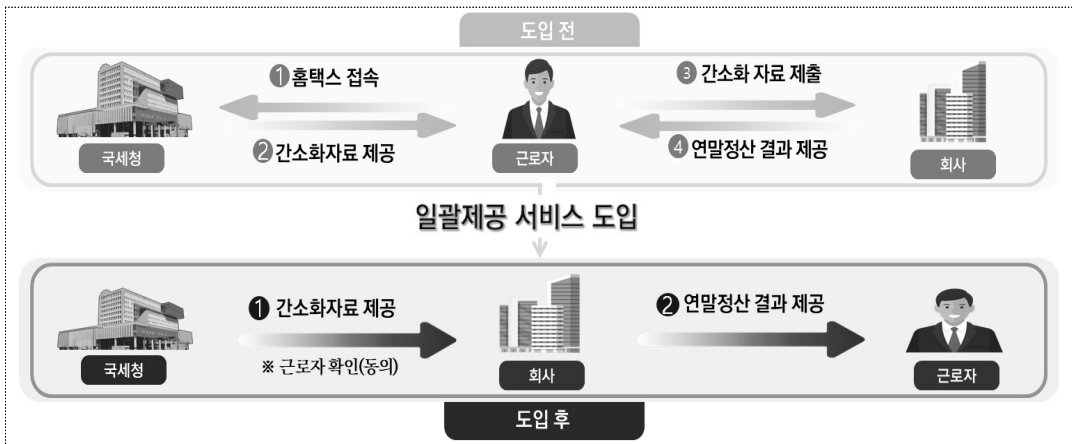
① 전자적 세원관리 체계

- 국세청은 지난 1990년대부터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여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이래
 -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전자적 세원관리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국내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비율이 2천 년대 초반 40% 미만에서 2017년 99.9%에 도달하는 등
 -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현금거래 세원을 양성화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모두채움이나 미리채움 등 신고도움자료로도 활용됩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

- 지난 2006년 개통 이후 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국세청 대표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는 2022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며,
- 지난해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납세자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전·후 연말정산 절차 비교 |



-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③ 빅데이터센터 설립

- 국세청은 지난 2019년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국세행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 빅데이터센터는 국세청 직원의 업무효율화에도 효과적이지만 세법 지식이 부족한 청년 근로자나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혁신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 특히, 납세자의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납부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제항목을 적용하는 등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III

K-전자세정 해외 수출 지원

- 대한민국 국세청의 첨단 전자세정에 세계 과세당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매년 조세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 국세청에서 K-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세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 해외 과세당국 연도별 방문현황 |

'19년	'20년	'21년	'22년
28개국	1개국	36개국	46개국
중국, 방글라데시, 헝가리, 체코,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코스타리카 ※ 코로나9 확산 으로 방문 축소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동티모르,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페루, 베트남, 에콰도르 등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페루, 멕시코, 코스타리카, 덴마크 등

① 인도네시아 수출

- 대한민국 전자세정 시스템의 우수성은 인도네시아에 국세행정시스템 수출이 성사됨으로써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 다수의 국세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시스템 통합(SI) 기업 LG CNS는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사업예산 : USD 87M(약 1천억원) ■ 사업기간 : 2021~2024년(3년 개발 + 1년 보수)
※ 주주 시점 전자정부 단일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

- 국세청은 국가 간 경쟁하는 대규모 사업 입찰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 발급, 인도네시아 공무원 방한 교육 주관, 한·인니 국세청장회의 개최 등 K-전자세정 우수성 홍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② 탄자니아 조세청(TRA) 공무원단 방한

- 지난 4월 18일에는 탄자니아 조세청(TRA)이 한국 국세청과 국세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출협력을 희망하여 고위 공무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 * 내국세국장·관세국장 외 7인(4.18.~4.20.)

- 국세청은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이틀간에 걸쳐 상세하게 교육하였으며 탄자니아 공무원단은 시스템 구축비용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

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탄자니아 조세청 공무원단은 4월 19일 LG CNS IT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확인하고 LG CNS에서 수출한 인도네시아 국세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 탄자니아 공무원단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세청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조만간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 김청장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국세전산시스템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인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③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 개최

- 국세청은 4월 20일 K-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국내 시스템 통합(SI)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간담회에서는 국세 시스템 수출 현황 및 해외 동향에 대한 브리핑과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 발급, 컨설팅·교육·인력 지원 등 K-전자세정 수출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방안을 설명하고
- 전자세정 수출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간담회에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다수의 국내 시스템 통합(SI) 업체들이 참여하여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 지원 업무를 「국세행정 역량강화 전담팀(TF)」 중점 추진과제로 지정하는 한편,
- 관련 업계와 전자세정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전자세정 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④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

- 2019년 설립한 빅데이터센터는 국세행정에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본격 접목한 주요 사례로 세계 주요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2021년 국세청은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헝가리 국세청과 빅데이터 기술협력을 포함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지난해에도 헝가리에서 개최된 한·헝가리 실무회의를 통해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공유하는 등 첨단 전자세정 수출·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4월 25일(화요일) 서울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제3차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세정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받고 싶어 하는 헝가리 국세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모두채움 및 모바일 서비스 등 국세청의 앞선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세정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 우리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이중과세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헝가리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 헝가리는 우리나라 동유럽 최초 수교국으로 최근 우리기업 직접 투자 크게 증가
 ※ '22년 우리나라의 對 헝가리 투자는 전년대비 117.3% 증가한 18.4억불, '19년과 '21년에 이어 헝가리 제 투자국이 됨(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헝가리 투자청)

-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한민국의 앞선 전자세정 시스템을 세계에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19일 (금)	5월 22일 (월)	5월 23일 (화)	5월 24일 (수)	5월 25일 (목)
미 달 러 (USD)	1332.70	1331.20	1319.10	1311.40	1317.50
일 본 엔 (JPY)	962.00	967.34	951.90	946.59	946.31
영 국 파 운 드 (GBP)	1654.35	1658.48	1640.37	1628.76	1629.48
캐 나 다 달 러 (CAD)	987.40	986.62	976.60	971.37	969.36
홍 콩 달 러 (HKD)	170.27	170.28	168.50	167.33	168.27
위 안 화 (CNH)	189.72	188.66	187.69	185.76	186.32
유 로 화 (EUR)	1436.12	1440.69	1426.01	1412.77	1416.97
호 주 달 러 (AUD)	882.98	885.65	877.14	867.03	862.11
싱 가 폴 달 러 (SGD)	988.83	990.07	979.69	973.72	976.6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3.77	293.31	290.04	286.96	286.94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여

— 국세청 : 2023. 5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하였습니다.
- (혁신방안)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 3가지 가치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입니다.

혁신 1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사전통지 기간 확대

[기준] 15일 ⇒ [확대] 20일 (중소납세자)

현장조사 기간 축소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 감축 운영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비례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자료요구 기준 마련

혁신 2

“충분히 경청하고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관리자 청문

관리자(과장, 국장)가 납세자 의견 직접 경청

조사결과 설명회

조사내용, 과세근거, 권리구제절차 상세 설명

혁신 3

“집단지성으로 적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Red Team이 납세자를 대변, 과세쟁점을 숙의하는 조사국 내 적법성 검토 기구 신설

- (향후계획)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오로지 세법과 판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리보호 법령은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세무조사 절차,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납세자 권리 조항 : ('07) 11개조, 25개항 → ('23) 18개조, 83개항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세무조사 절차	납세자 권리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최소한의 범위 실시 ▶ 중복조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사전통지, 중지·연장 제한 ▶ 세무조사 결과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권익을 촘촘하게 보장받는 동시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력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81의17)
 - 공정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은 확보하면서도 납세자의 의무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 한편, 세무조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몫의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습니다.
 - 적법절차를 통한 「절차적 정의」와 적법과세를 통한 「실체적 정의」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이에 '22년 하반기부터 「적법절차·적법과세 전담조직(TF)」을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관행과 문화로 확립되도록 조사행정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행정 혁신방안

-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위해 적법·공정·공감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사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사전통지 기간 확대, ② 현장조사 기간 축소, ③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 적법절차의 핵심은 청문과 고지입니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聽聞),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告知) ④ 「조사관리자 청문」과 ⑤ 「조사결과

설명회」를 운영합니다.

- 적법과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⑥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행정혁신

혁신1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사전통지 기간 확대

[기준] 15일 ⇒ [확대] 20일 (중소납세자)

현장조사 기간 축소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 감축 운영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비례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자료요구 기준 마련

혁신2

“충분히 경청하고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관리자 청문

관리자(과장, 국장)가 납세자 의견 직접 경청

조사결과 설명회

조사내용, 과세근거, 권리구제절차 상세 설명

혁신3

“집단지성으로 적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Red Team이 납세자를 대변, 과세쟁점을
숙의하는 조사국 내 적법성 검토 기구 신설

[혁신1]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① 사전통지 기간 확대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현행 15일 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세무조사 준비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 그간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는 의견**이 있습니다.

* 사전통지 기간(국세기본법§81의7) : ('96.12월) 7일 → ('07.1월) 10일 → ('18.1월) 15일

** '22.8월 국세청장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시, 사전통지 기간 확대 건의

-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확대 시행합니다.

* 대상 :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② 현장조사 기간 축소

-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면서도 세무조사가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하는 세무조사 방식

-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 우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③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을 개편했습니다.

- 그간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세무조사를 받을 때 과도한 자료요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2022년 중소기업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중소기업중앙회, '22.10월)

-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①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②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③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장 사례 ①] 세무조사 시작, 당초 걱정보다 실제 부담이 상당히 줄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는 최근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사업상 중요한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가 진행 중이라 세무조사를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사전통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 덕분에 급한 인허가 업무를 먼저 마무리할 수 있었고,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세무조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제조업체 대표 A씨 사례

조사가 진행되면서 “「2020.4.30. 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갑(甲)사와의 임대차 계약서」처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니 자료를 준비하는 부담도 훨씬 줄어들었다.”는 부동산 임대업체 재무팀장 B씨 사례

[혁신2] 충분히 경청하고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④ 조사관리자 청문

- 조사관리자(과장 또는 국장)가 납세자의 소명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하였습니다.

-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하여 세무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聽聞)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리자 중심의 적법·책임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 우선,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서울지방국세청)하며, 향후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⑤ 조사결과 설명회

-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를 신설하였습니다.
-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告知)함으로써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장 사례 ②] 세무조사, 들어주고 알려주니 수긍이 됩니다.

지방청 조사국 과장이 세무조사 현장에 방문하였다. 조사팀이 무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과세쟁점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과장에게 직접 말해달라고 한다. “세무조사가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만 느꼈었는데, 납세자가 조사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는 제조업체 대표 C씨 사례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조사결과 설명회」가 열렸다. “조사팀으로부터 조사내용, 과세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조사결과에 대해 이해가 쉽게 된 것은 물론,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평소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준비 방법까지 안내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 는 도매업체 부대표 D씨 사례

[혁신3] 집단지성으로 적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⑥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결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하여 과세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합니다.
-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 * 지방청 조사국 내 법령 판례 등을 검토하여 조사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담팀
- ** 납세자 입장만을 대변하는 레드팀(Red Team) 역할, 관련 조사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과세여부를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적법과세를 구현하고 불복청구로 인한 납세자 부담과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현장 사례 ③] 조사국, 적법과세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다.

지방청 조사국장 E는 조사업체의 해외 송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해야한다는 조사팀 의견에 대해 납세자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국장은 해당 쟁점을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에 상정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레드팀(Red Team)에 포함시켜 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사팀과 레드팀 간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심의팀이 판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지침, 주석서 해석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해졌다. E국장은 검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송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3

향후 업무방향

- 국민의 시각과 의견이 혁신의 방향과 경로를 결정합니다.
 - 이번 「세무조사 혁신방안」도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납세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습니다.
 - 헌법가치인 「적법절차」와 최상의 납세서비스인 「적법과세」를 일선 세무조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 아울러, 「적법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로 선정

- 국세청 : 2023. 5

기획재정부는 '23.5.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23.5.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됩니다.
- ❷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 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❹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관 부서) ❶ 조세특례제도과 ❷ 법인세제과(044-215-4220) ❸,❹ 금융세제과(044-215-4230)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시행령(영), 시행규칙(칙)

1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 (미래형이동수단 분야) 5개 기술, 3개 시설 추가



국가전략기술(시행령 별표7의2)	사업화시설(시행규칙 별표6의2)
①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②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③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④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⑤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①~③ 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전기차 생산 시설 포함

☐ (수소 분야) 5개 기술, 5개 시설 추가

국가전략기술(시행령 별표7의2)	사업화시설(시행규칙 별표6의2)
①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②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③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④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⑤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①~⑤ 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2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적용대상 확대

- ①** (기존)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등
- ②** (추가)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 추가

3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 펀드 유형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재산 및 특정금전신탁 포함)

☐ 펀드 요건(국내자산에 투자)

- ①** (공모펀드) BBB+ 등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전체 회사채 편입비율 60% 이상) 편입
- ②** (사모펀드*) BBB+ 등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 A등급(A- ~ A+) 회사채 15% 이상을 각각 편입

*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은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취급

4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 ☐ 보유기간 요건
 - 만기가 10년 이상인 국채로서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
- ☐ 과세특례 대상 매입한도(총 2억원) 적용방법
 - 국채의 만기가 도래한 순서대로 적용하고, 만기일이 동일하면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용

5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대상지역 조정

(영 §56·§79의8·§79의10)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되어 과세특례 적용 이전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현행처럼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조정
- * 「경상북도-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 법률」 제정으로 '23.7.1일부터 경상북도→대구시로 편입

빅데이터 기획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세액 정리 강화

— 기획재정부 2023. 5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17(수)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다.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개최되었다.

* 국세청 소관 체납액(조원, 누계) : ('21.6월) 98.7<최초집계> ('21.12월) 99.9 ('22) 102.5

관세청 소관 체납액(조원, 누계) : ('20) 1.1 ('21) 1.6 ('22) 1.9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19개) 추가 편성

** 신규체납자 모바일 일괄안내 : ('22년) 1백만원 이상 → ('23년) 50만원 이상

관세청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체정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기존 연 2회 일시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한다.

* 전담팀 : 서울·부산세관에 '125추적팀' 4개팀 운영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관별 체납세액 관리 강화 계획 -

[1]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강화]

- (추적조사 강화) 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은닉,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재산추적조사 강화
 - *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가족친인척 명의 재산 이전 등
- (현장활동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
- (전담조직 보강)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에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
 - * 지방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19개署)

[단계별 체납 대응 강화]

- (단계별 대응강화) 단기·일시 체납자는 기존 전화·우편 안내 외 모바일 납부독려*를 확대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활동 강화
 -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 집행
 - * 신규체납자 모바일 일괄안내 : ('22년) 1백만원 이상 → ('23년) 50만원 이상
- (행정제재 강화)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간접적인 체납액 납부 강제수단 적극 활용,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홍보 강화(지급한도 20억원→30억원)
 - * 일정요건(1년·3회·5백만원 이상 체납) 해당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현황 통보
- (업무효율성 제고) 소장작성시스템*·체납자유형분류시스템**(시범운영) 등 체납업무 전산화 추진, 직무교육 확대로 전문성 제고
 - *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재산 추적조사 시 필요한 소장 작성 지원
 - ** 체납자의 납부성향, 재산상황 등을 데이터 분석하여 징수활동방향 제시

[2] 관세청

[체납예방 강화]

- ❶ (통관단계 심사 강화) 고세율 농산물 수입신고 시 저가신고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여 체납발생 사전 방지
 - * 마늘, 생강, 고추 등 30개 품목에 대해 철저한 사전세액심사 시행
- ❷ (추징 전 재산압류 강화) 관세포탈 행위로 체납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납부고지 전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 재산 압류 조치 강화



[체납정리 강화]

- ❶ (은닉재산 추적 강화) ①전담팀*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 현장추적 강화, ②기존 연 2회(상·하반기) 실시 중인 「체납액 일제정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

* 전담팀 : 서울·부산세관에 '125추적팀' 4개팀 운영

- ❷ (행정제재 강화) ①명단공개, ②출국금지, ③관허사업 제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 유도

* 세관장이 다른 주무관청의 장에게 체납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아니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재 ('23.1.1.관세법 개정시행)

- ❸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지급률이 상향*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체납자 관련 단체·협회·업계 종사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 확보

* 체납액 징수금액 2천만원~2억원 : 15% → 2천만원~5억원 : 20%(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월))

** 무역업 종사자 정보보유 유관기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입협회 등)을 통한 홍보

- ❹ (유관기관 협업) 국세청,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①과세자료 정보교환, ②농산물 수입권 공매* 체납자 참여 배제 등을 통해 체납예방 및 정리 강화

* 저세율 통관이 가능한 일정량의 수입권을 민간업체에게 배분하는 공매 절차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 국세청 : 2023. 5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 ◆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합유로 부동산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등
- ◆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

- (추진성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에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채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 최근 합유* 등기,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합유 :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됨

-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하고 기획분석을 확대하여 고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채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 등을 파악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채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와 수색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중점 추진사항

- 이번 실시하고 있는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57명입니다.
- 먼저, 올해는 부동산 합유 등기를 악용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지능적 채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이용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채납자, 고액 복권에 당첨된 채납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채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 26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강제징수를 추진하여 현재 103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하였습니다.
-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채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내역, 소득·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를 정밀 분석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채납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납자, 고액을 탈세하고 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 사업을 계속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납자, 타인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채납자 등

-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채납자 29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중점 추진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 계	변칙적 재산은닉 채납자 (261명)			호화생활 영위 고액채납자
	합유등기·허위근저당설정채납자	고액 복권 당첨 채납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채납자	
557명	135명	36명	90명	296명

3 주요 추진사례

재산추적조사* 사례

*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여 각종 증거자료 확보, 소송제기, 형사 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의 채납처분 과정

- 합유등기·허위근저당 설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채납자 135명,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은닉한 고액채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소유한 상습채납자 90명

추적사례 ①	변칙적 등기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임대사업자
<p>■ A는 임대사업자로 임대부동산 양도 후 고의로 채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함</p> <p>⇒ 합유 취득 전, 채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되어 채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 착수</p>	
추적사례 ②	특수관계인과 허위근저당 설정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주택건설업자
<p>■ B는 주택건설업자로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소유 주택·상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징수 회피</p> <p>⇒ 근저당설정 채권자가 특수관계인(母)으로 재산추적조사 결과 허위로 설정된 계약임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p>	
추적사례 ③	로또 1등 당첨 후 특수관계인 계좌에 재산을 숨긴 고액채납자
<p>■ C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고액채납자로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가족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도 인출</p> <p>⇒ 채납자의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여 징수하고 가족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 인출자금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착수</p>	



추적사례 ④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상습채납자
<p>■ D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상습채납자로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 분담금을 수년간 불입하면서 세금납부는 회피</p> <p>⇒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기획분석하여 채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 압류하고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p>	

-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납자, 특수관계인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채납자 등 296명

추적사례 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미등록 사채업자
<p>■ E는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던 자로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가 고가주택·고급차량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은닉</p> <p>⇒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차량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예정</p>	

추적사례 ⑥	세무조사 중 재산은닉 후 폐업, 친인척 명의로 계속사업하는 채납자
<p>■ F는 인테리어 사업자로 세무조사 중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중이던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하여 재산 은닉</p> <p>⇒ 채납자의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및 주거지 수색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여 채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p>	

수색* 사례

* 재산추적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채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징수 현장활동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채납자에 대해 적시성 있게 수색을 실시하여 채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색사례 ①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p>■ 채납자는 무역업체 대표로서 법인자금 부당 유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채납 발생, 채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 영위</p> <p>⇒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하여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과 구두 등 수백여 점, 다수의 귀금속과 고가 외제차량을 압류하여 총 5억 원 징수</p>	

수색사례 ②	소송대리인 명의 오피스텔 거주하며 상속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p>■ 상속세 과소신고 및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체납 발생 후, 소송대리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재산 은닉</p> <p>⇒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처분 후 법원에 공탁되어 있던 양도대금을 강제징수하고 오피스텔 수색을 통해 현금·귀금속 등 1억 원 징수</p>	
수색사례 ③	자녀 명의 주택 거주하며 양도대금을 개인금고에 은닉한 체납자
<p>■ 고령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관련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강제징수 회피</p> <p>⇒ 7회 이상 잠복·탐문하여 체납자가 자녀명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 실시하여 휴지·담요 등으로 숨겨놓은 개인금고에서 현금 4억 원 징수</p>	
수색사례 ④	배우자 명의 고급주택 거주, 고가 미술품 소장 등 호화생활 명단공개 체납자
<p>■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가족명의로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로 출퇴근하며 호화생활</p> <p>⇒ 10회 이상 잠복·탐문하여 체납자가 부촌지역 고급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 실시하여 현금·외화 1억 원 및 미술품 압류하여 총 4억 원 징수</p>	

4 추진성과

-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고의적 체납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으며
 -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도 강화하여, '22년에 총 2조 5,629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한 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하여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5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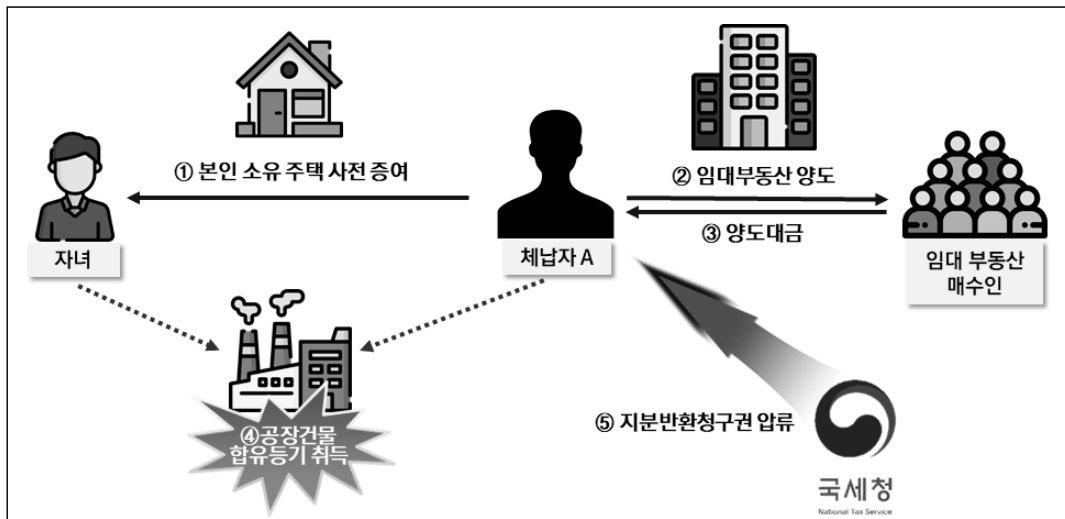
-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합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붙임 1 주요 추진사례

추적 사례	① 변칙등기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임대업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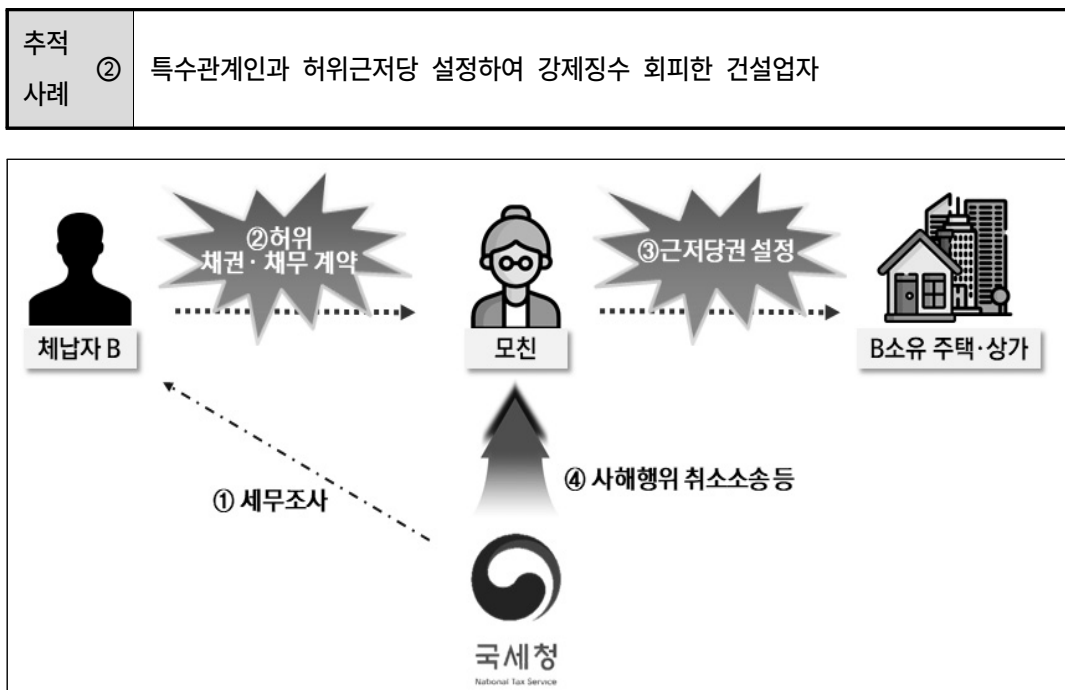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0억 원 체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前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함
- 한편, A는 위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

득함, '합유'는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강제징수 회피할 의도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
- 합유취득 공장건물에 대해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예정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신고 무답부, 〇억 원 체납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
- 세무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체납 발생 前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모친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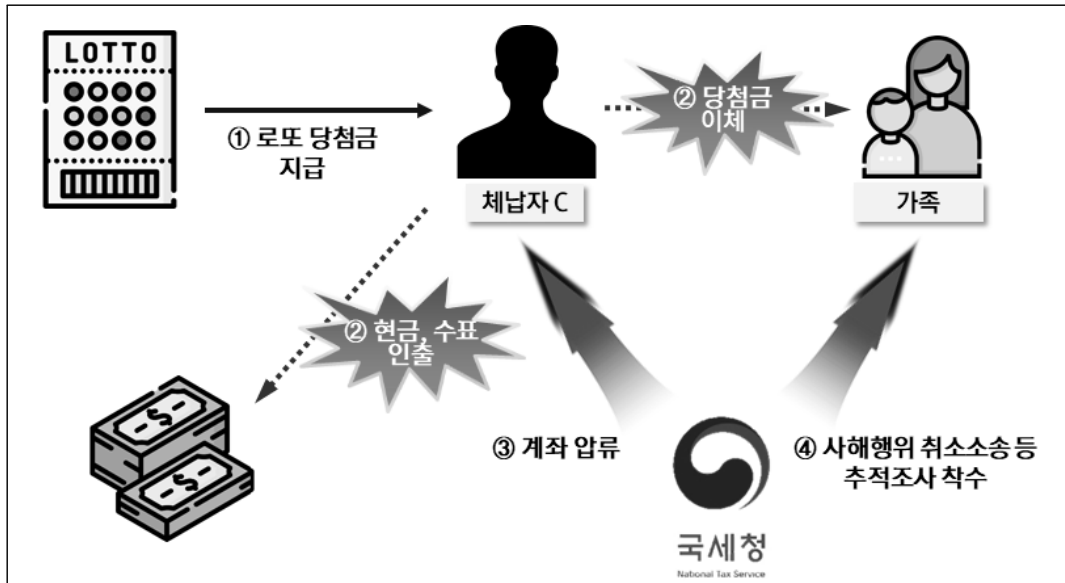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재산추적조사 착수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실제로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저당임을 확인



－ 근거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추적 사례	③ 로또 1등 당첨 후 특수관계인 계좌로 재산을 숨긴 고액채납자
-------	-------------------------------------



● 채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〇억 원 채납

- 유통업을 운영하던 C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채납 발생
- 최근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였으나,
 - － 채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

● 재산추적조사 방향

-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 압류하여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 －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자금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진행

붙임 2 수색 사례

수색 사례	①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	--------------------------------------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등 경정 고지, 무납부하여 〇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주)〇〇회사의 대표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 발생
 - 유출된 거액의 자금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생활실태 확인 한 바 체납자는 부촌지역에 위치한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총 4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 실시한 결과 실거주지가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 아파트(64평형)인 것으로 확인함
 - 주거지 수색을 실시하여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여 점과 외제차량을 압류 및 공매하여 총 5억 원을 징수

수색 사례	② 소송대리인 명의 오피스텔 거주하며 상속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	-------------------------------------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상속세 및 양도세 무납부하여 〇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상속세 과소신고에 따른 결정 및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신고 무납부하여 고액의 체납발생
 - 체납자의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자금흐름이 불분명하여 제3의 장소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재산추적조사 착수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공탁금 즉시 압류함
 -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4회 이상에 걸쳐 잠복추적 실시하고 체납자가 소송 대리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 실거주지 수색 실시하여 현금 및 귀금속 1억 원 징수

수색
사례

③

자녀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개인금고에 현금으로 은닉한 체납자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후 무납부하여 〇억 원 체납
- 체납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후 고액 양도소득세 체납
-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수십 차례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한편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함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체납자와 자녀의 거주지를 7회 이상 잠복과 탐문 실시하여 체납자가 자녀명의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휴지와 담요 등으로 은폐되어 있는 개인금고를 발견하고 현금다발 총 4억 원 징수

수색
사례

④

배우자명의 고가주택 거주하며 고가 미술품 소장 등 호화생활한 명단공개 체납자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법인·부가세 등 〇〇억 원 체납
- 체납자는 호텔골프장을 운영하던 체납법인의 대표로서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종합소득세 고지되어 체납 발생하였고 해당법인은 폐업함
- 체납자는 가족명의로 법인설립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면서 동법인의 임원으로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를 사용하며 출퇴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총 10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한 결과, 배우자 명의 부촌지역 소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현금·외화 1억 원과 거실과 지하에 보관중이던 미술품 수집품을 압류하여 총 4억 원 징수